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선임연구위원
khlee@kiep.go.kr

손성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위원
shson@kiep.go.kr

장윤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위원
yhjang@kiep.go.kr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위원
khryou@kiep.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본 연구의 목적은 유가하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중동 산유국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기업의 중동 지역 진출에 필요한 시사점과 한·중동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산업정책, 고용정책, 통상정책, 투자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함.
- ▶ 2014년 하반기 이후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GCC 국가들은 새로운 중장기 경제 개발계획과 다양한 경제정책을 통해 핵심 정책목표인 산업 다각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역량 제고,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육성 등이 강조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자국민 의무고용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자국민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현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율 인상, 비관세조치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지화 정책을 통해 자국 내 고용과 생산을 늘리고자 함.
- ▶ 우리 정부와 진출기업은 현지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응하면서도 국내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진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하여 양 지역 간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디지털 협력을 강화함.
 - 국내 진출기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 현지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응해서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조달도 늘리는 한편 국내 기술수준을 한층 더 개선하는 대응방안이 필요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 하반기 이후 중동 산유국은 유가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역 및 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원유수요가 감소하면서 유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움.
 - 중동 산유국은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와 국제유가 등락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비석유부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임.
 - 또한 기술혁신 역량 제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자국민 고용확대를 위한 고용정책, 현지 생산 및 조달을 늘리기 위한 통상 및 투자(규제)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유가하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중동 산유국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기업의 중동 지역 진출에 필요한 시사점과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회원국가들임.
 - 경제정책은 산업정책, 고용정책, 통상정책, 투자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재정, 금융정책 등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은 연구대상에서 배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과 중장기 경제계획

- GCC 국가들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저유가 기조의 장기화라는 도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핵심 정책목표인 산업 다각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단순 제조업보다는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GCC 회원국의 중장기 계획에 나온 중점 육성 산업에는 의료장비, 항공우주 등과 같은 첨단기술 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스타트업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함.
- GCC 국가들은 노동수요를 창출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에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직업훈련제도 개선 및 직무능력 제고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청년실업률도 높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3개의 비전 실현 프로그램에 ‘인적자본 개발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자국민의 직무역량을 개선하고자 함.
- 또한 첨단기술 획득 및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의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GCC 국가들은 경제개발계획에 외국인 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선정하고 관련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줄이고 현지 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늘리면서도 자국민 고용 및 현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입찰기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국민 고용 및 현지 생산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현지화 제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표 1. GCC 국가별 중장기 경제계획의 주요 내용

| 국가 | 비전 (발표 연도) | 경제부문 중심 목표 | 특성 | 중점 육성 산업 |
|---------|--------------------------|--|--|-----------------------------------|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 비전 2030 (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 현지 생산 비중 확대 •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 민간 부문 비중 및 비석유 부문 수출의 GDP 비중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민 고용 확대 관련 프로그램 및 현지화 정책 강화 •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 육성 및 투자 확대 | 관광, 방산, 재생에너지, 조선, 엔터테인먼트 |
| UAE | 비전 2021 (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 자국민의 민간 부문 노동참여 확대 • 일류 교육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및 R&D 촉진 • 사회계층의 통합 강조 | 환경, 보건, 교육, 친환경·고부가 가치 산업 |
| | 센테니얼 2071 (2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중점 정부 • 우수한 교육 • 다각화된 지식경제 • 행복하고 응집력 있는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대비한 장기 비전 구축 • 과학 투자 및 과학자 육성 강조 • 여성 참여 확대 | 첨단기술, 우주과학, 공학, 보건 |
| |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각화된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 부문에서 지역 및 세계 시장 중점 부문 분류 | 에너지, 석유화학, 금속, 항공우주, 생명공학, 통신 서비스 |
| | 두바이 플랜 2021 (20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 중심축으로 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중심지, 기업 친화적 도시 면모 강화 | 교역, 물류, 관광, 금융 |
| | 두바이 산업전략 2030 (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지식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생산기지 및 이슬람 경제의 중심지 추구 | 항공우주, 해양, 금속, 제약 및 의료장비, 식음료, 기계 |

표 1. 계속

| 국가 | 비전 (발표 연도) | 경제부문 중심 목표 | 특성 | 중점 육성 산업 |
|------|----------------------------|--|---|----------------------------|
| 카타르 | 카타르 국가비전 2030 (2008) | • 인력개발 및 경제개발 | • 예산 투입 시 모니터링 강화 • 민간 부문 주도의 성장 추진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첨단제조업, 에너지, 금융, 물류, ICT |
| 쿠웨이트 | 쿠웨이트 비전 2035 (2017) | • 경제구조 다각화 • 사회기반시설 개발 • 보건의료 품질 향상 • 인적자원 개발 | • 신산업 육성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물류, 석유화학, 관광, 보건의료, ICT |
| 오만 | 오만 비전 2040 (2018) | • 경제구조 다각화 • 자국민 고용 증진 •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 | • 경영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교육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 제조업, 물류, 관광, 어업, 광업 |
| 바레인 | 바레인 경제비전 2030 (2008) | • 산업 다각화 • 정부 혁신 • 사회 인프라 개선 | • 생산성과 기술향상을 통한 성장 촉진 • 높은 잠재력이 있는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둔 경제 다각화 | 금융, 관광, 서비스, 제조업, 물류 |

자료: 보고서 제2장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산업정책: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①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석유 부문 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GCC 국가에서는 산업 다각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GCC 국가의 혁신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국가별 혁신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2020 결과에 따르면, GCC 국가의 순위는 131개국 중 34위를 기록한 UAE를 제외하고 모두 60~80위권에 그침.
 - 혁신 투입 대비 산출 평가에서도 GCC 국가들은 투자 수준에 비해 성과가 적은 것으로 파악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관련 장기 비전 개발을 추진함.
 - KACST는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NSTIP: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lan), 국가산업개발 및 물류 프로그램(NIDLP: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2002년 수립된 NSTIP는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목표로 인적자원 역량개발,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혁신활동 지원, 혁신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이전 및 현지화, 혁신 촉진을 위한 법 및 제도적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함.

- 2019년 1월 발표된 NIDLP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과 투자계획을 제시함.
 - NIDLP는 사우디아라비아를 4차 산업혁명의 강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변모시키는 한편 자국민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개선, 현지 조달 확대 등을 목표로 함.
 - 산업, 광업, 에너지, 물류를 4개 중점 부문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총 4,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 UAE는 경제성장 및 경쟁력 강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요소로 혁신 및 창조성을 강조해왔으며 장기 경제정책을 계획하는 한편 이를 위한 부문별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4년에는 「UAE 비전 2021」을 실현하고 2021년까지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혁신전략(National Innovation Strategy)이 발표됨.
 - 재생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기술, 수자원, 우주 등 7개 부문이 혁신 중점 부문으로 선정됨.
- 내각미래부는 2017년 수립된 UAE 4차 산업혁명 전략(UA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UAE 4차 산업혁명 전략은 혁신교육, 인공지능, 유전체 의학, 로봇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생명공학,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의 첨단기술을 산업에 활용하고 미래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 2018년에 국가혁신전략을 발전시킨 국가선진혁신전략(National Strategy for Advanced Innovation)이 수립됨.
 - 전략을 통해 UAE는 혁신, 소통, 학습을 위한 국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모델을 시도하고자 하며 혁신 분야에서 전문화된 선도적 국제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함.

②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신산업 육성

●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핵심 요소임을 밝히며 비전의 3대 영역(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진취적인 국가)에 걸쳐 관련 계획을 발표함.

- 계획에는 디지털 일자리 창출, 디지털 경제의 GDP 기여 확대, 선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우수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017년에는 칙령을 통해 각료위원회인 국가디지털전환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Digital Transformation)가 구성되었으며 위원회의 집행부 역할을 하는 국가디지털전환기구(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Unit)가 설립됨.
 - 국가디지털전환위원회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부가 운영하는 정부 서비스 플랫폼인 압셰르(Absher)를 통한 서비스 처리 건수가 2,600만 건 이상이며, 이로 인해 절감된 비용이 약

40억 달러로 파악됨.

- 법무부는 ‘종이 없는 법정(paperless court)’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법무부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나지즈 포털(Najiz Portal)을 운영하고 있음.
- 재무부는 2018년 1월 정부기관 및 민간 부문 계약자가 재무부의 전자 조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인 에티마드(Etimad)를 구축함.
- 보건부는 1차 보건의료센터 방문 시 예약 및 관리할 수 있는 앱인 마우이드(Mawid), 온라인 원격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하(Sehha) 등을 운영하고 있음.

● UAE에서는 2013년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 겸 총리가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로의 전환 추진을 발표한 이후 관련 국가계획 및 전략이 수립됨.

- 2014년에는 5개년 계획인 스마트 정부 국가계획 목표(The National Plan for UAE Smart Government Goal)가 수립됨.
 - 계획은 사람, 정부, 지식, 혁신 등 4개 전략 영역을 설정하고 소비자 만족 향상, 정부 효율성 증대, ICT 연계 지식 창출 및 공유, 혁신 강화를 추진함.
- 지방정부별로는 아부다비가 모든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포털인 탐(Tamm)을 구축하였으며 두바이는 2021년까지 정부 서비스를 모두 전자화하는 페이퍼리스 전략(Dubai Paperless Strategy)을 추진하고 있음.
 - 탐은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 구매, 차량 구매 및 운전, 창업, 의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원이 포함됨.
 - 두바이는 기존 정부 서비스 및 운영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통합된 디지털 정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에는 이와 관련하여 ‘100% 페이퍼리스 스탬프(100% Paperless Stamp)’ 계획을 발표함.

●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과 작업장 안전성을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석유 부문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Aramco)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에너지 부문에서의 혁신을 이끌고 있음.
 - 아람코는 로봇, 드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산업시설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또한 선도적 디지털 에너지 기업을 목표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연비 향상, 용수 절약, 차세대 소재 창출 등 세계 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함.
 - 2019년에는 4차산업혁명센터(4IRC: 4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첨단기술 능력을 고양하려 함.

-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석유 및 가스 4.0(Oil & Gas 4.0)이라는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선도적 기술의 도입, 차세대 역량 강화, 저탄소 발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수행하려는 계획을 밝힘.
 - ADNOC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 및 관리 비용을 감축하려 함.
 -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ADNOC는 2018년 파노라마 디지털 관제센터(Panorama Digital Command Center)를 설립함.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IC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ICT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인 ICT 전략 2023(ICT Strategy 2023)을 발표함.
 - ICT 전략 2023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이 기간에 ICT 부문 50% 성장, GDP 기여 규모 500억 리얄(약 133억 3,000만 달러) 증대, 자국민 노동인력 비중 50%로 확대, 여성 참여 50%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일곱 가지 중점 부문으로 보건, 교육, 전자상거래, 스마트시티, 산업·광업·물류 서비스, 성지순례 및 문화, 보안 및 안전 등을 선정함.
- UAE는 ICT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ICT 특화 자유지대(free zone)를 1990년대부터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통신규제청(TRA: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이 ICT 관련 프로젝트 투자를 목적으로 ICT 기금(ICT Fund)을 조성함.
- 디지털 기술은 UAE의 중점 산업인 우주, 생명과학 등 부문에서 핵심기술로 적용되고 있음.
 - 우주 부문은 UAE 국가혁신전략의 주요 분야로 UAE 정부는 UAE 국가우주정책(UAE's National Space Policy), 국가우주전략 2030(National Space Strategy 2030) 등을 수립하고 우주산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③ 스타트업 지원 강화

●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의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왔음.

- 사우디 기술개발투자회사(TAQNIA)의 자회사인 BIAC(Business Incubators and Accelerators Company)는 2017년부터 공공·민간 부문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2007년 시작된 바디르 기술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뿐 아니라 마케팅 기술 향상, 자금조달 기회 확대, 지적재산 등록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워크숍 및 강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청년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 기업 등과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음.
 -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KAUST: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SABB(Saudi British Bank)와 제휴하여 2016년 타까담(TAQADAM)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수립함.
 - 아랍코는 2011년 기업이 육성을 위한 조직인 와에드(Waed)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음.
- UAE는 스타트업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서며 지역 내 스타트업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육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아부다비 정부는 2018년 경제개발계획이자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가단 21(Ghadan 21) 계획을 수립함.
 - 가단 21은 3년간 500억 디르함(약 140억 달러)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50개가 넘는 이니셔티브가 수립된 가운데 다수 계획이 스타트업 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가단 21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설립된 Hub71은 아부다비의 기술 허브로 벤처 캐피털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본 접근성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기술기업 및 스타트업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아부다비 투자 지원기관인 ADIO(Abu Dhabi Investment Office)는 가단 21 계획의 일환으로 벤처스 펀드(Ventures Fund)를 조성함.
 - 5억 3,500만 디르함(약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스 펀드는 아부다비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스타트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대하고자 함.
 - 두바이 정부는 2016년 두바이 퓨처 액셀러레이터(DFA: Dubai Future Accelerators)를 출범함.
 - 두바이 퓨처 액셀러레이터는 기업가, 민간 부문, 정부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3) 고용정책: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

① 자국민 고용 확대

- 최근 GCC 국가들은 자국민 의무고용이라는 큰 틀의 제도적 장치는 유지하되 이를 보완하거나 부수적인 제도를 추가 시행하는 방법으로 자국민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저유가 기조 지속 등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자국민에 대한 복지 수준을 유지하거나 고용 상황을 안정화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자국민 고용 확대에 대한 GCC 국가들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 기존 자국민 의무고용제를 대폭 보완한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에 대한 재정비 및 적용 기준 강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함.
 - 2020년에는 엔지니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에도 의무고용 기준을 적용하였음.
- UAE는 의무고용비율 설정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자국민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조치를 개발하고 있음.
 - 2012년 UAE 정부는 민간기업이 자국민 노동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해당 고용인의 직업훈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압셰르 이니셔티브(Absher Initiative)를 도입하였음.
 - 2016년에도 타우틴 게이트(Tawteen Gate) 시행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민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음.

● GCC 국가들은 자국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부문 고용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2010년대 초중반에 걸쳐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임금 지불 시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여 지불 여부 및 지불액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임금보호제도(Wage Protection System)를 잇따라 도입하였음.
- 그간 카타르 정부는 공공 부문에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였으나, 2020년 이를 전체 노동시장으로 확장하여 민간 부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하였음.
- 2020년 UAE 정부는 생후 6개월 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남성 근로자에게 5일간의 출산휴가를 지급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민간 부문 노동시간을 축소시키고 자국민 실업자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② 직무역량 제고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국민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인적자원개발펀드(HRD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를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펀드는 2015년 자국민에게 무료 온라인 강좌 및 해당 프로그램 수수료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도롭(Doroo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18년부터는 자국민 중 최근 6개월간 취업을 하지 않은 고학력 졸업자에게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에서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탐히르(Tamheer)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직업훈련청은 2013년에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외국의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 기관이 자국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일종의 민관 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CoE(Colleges of Excellence)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없애고 직업훈련 기회를 늘려 여성 노동력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여성을 위한 모바일 기술 및 전기설비 정비 등에 대한 무료 교육 과정을 시작하였고, 2020년 9월에는 여성에게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가르치는 디지털 대학을 리야드와 젓다에 각각 설립하였음.
- UAE 정부는 저유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취업 의지와 기술 관련 직업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아부다비에서는 아부다비 기술직업교육훈련센터, 아부다비 직업교육훈련원, 국립직업교육원 등의 기관이 취업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아부다비 기술직업교육훈련센터는 현지 자동차 유통 및 부품 생산기업인 알 하브투르 모터스(Al Habtoor Motors)와 함께 자동차 분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훈련 종료 후에는 우수한 학생을 채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음.
 - 2020년 6월 샤르자 정부도 샤르자 교육원(Sharjah Education Academy) 설립에 관한 왕령(Decree No. 10)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국가들은 자국 내 직업훈련 역량을 글로벌 기업과 연계하여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기술직업훈련청(TVTC)은 2019년 중국 화웨이(Huawei)의 자회사인 HAINA (Huawei Authorized Information and Network Academy)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리야드에 HAINA 아카데미(HAINA Academy)를 설립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청년들에게 ICT 기술 관련 실무교육과 향후 화웨이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UAE의 고등기술대학(HCT: The Higher Colleges of Technology)은 2020년 1월에 세계적인 IT 기업인 오라클과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기술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음.
 - 우리나라의 포스코, 삼성전자 등의 기업도 한국 초청 연수 프로그램 추진, 현지 기술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GCC 국가들과 직업교육훈련 부문에서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음.

4) 통상·투자 정책: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① 관세율 인상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20년 6월 관세율 인상에 나섰으며, 이것이 다른 GCC 회원국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기업의 대GCC 진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 GCC는 2003년 관세동맹을 출범하면서 역외 수입에 대한 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2000년까지만 해도 10%를 상회하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의 관세율은 2003년 관세동맹 출범을 기점으로 하락하였음.
- 관세동맹이 체결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GCC의 관세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 바레인,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회원국 대부분의 관세율이 소폭 인상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에 자국 도착 상품 대부분에 대해 5%의 GCC 통합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2020년 6월 20일부터 약 1,390개의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단행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율 인상 조치는 지난 5월 부가세를 5%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으로,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직 다른 GCC 국가들은 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정부 재정 수입 확충 및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한다면 이는 중동 내 최대 수출국이 집중된 GCC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상품 수출감소 및 현지 건설 프로젝트 수주기업의 비용증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음.

② 비관세조치 증가

● GCC 국가들은 공동법령을 마련하고 최근 수입규제 및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GCC의 무역 대응 관련 공동 법안이 2004년에 마련되었으며, 관련 조사 및 대응은 2015년 이후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관세 부과를 통해 늘어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2004년 덤핑, 보조금, 수입 증가 등의 행위에 대한 GCC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반덤핑, 상계관세(Countervailing),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관한 GCC 공동 법령(common law)'을 마련하고 개별 회원국은 공동 법령을 기초로 자국의 제도를 정비해왔음.
 - GCC 공동 법령은 2004년 도입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현지 정부의 재정수입 확충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자국기업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한 2015년 이후부터 활용되기 시작함.
 - 지금까지 진행된 GCC의 수입규제조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수입 억제에 대한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규제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해 진행된 GCC 차원의 수입규제는 조사 중인 건을 포함해 총 4건(1건의 반덤핑 관세, 3건의 세이프가드)이 있음.
- GCC 공동 표준기구인 GSO의 공동 표준 인증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체 인증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GCC 국가들이 건강 및 안전, 라벨링,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무역 기술조치(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식품만 섭취해야 하는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식품 성분 중 알코올,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통보도 늘어나고 있음.
- 최근 GCC 개별 회원국 차원의 에너지, 통신 및 전자기기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출 시에 해당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통관절차도 이전보다 복잡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 강화는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규제의 절차가 까다롭고 투명성이 낮은 중동 지역에서 이는 또 하나의 비관세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③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 최근 GCC 국가들의 투자정책 변화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최근 GCC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투자 유입의 상당 부분이 특정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외국기업의 투자지분 제한 철폐는 최근 GCC 국가들 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책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기존 제도하에서는 현지인 참여 없이 외국인 소유의 단독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합작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지분 규모의 제한을 받았음.
 -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GCC 국가들 중 최초로 투자지분 규정 완화에 대한 정책적 움직임을 본격화하였으며, 카타르는 2019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 단독 지분 소유를 허용하였음.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관세 등 각종 세금 면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FDI 유치와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자본 규모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거주권제도를 시행하였음.
 - 같은 해 쿠웨이트 정부도 현지화 실적이 높은 외국기업에 다양한 투자 혜택을 제공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였음.

● GCC 국가들은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얼마나 자국 경제 및 고용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입찰에 특혜를 부여하는 현지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지화 제도는 입찰 과정에서 과거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s) 사용 여부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외국기업들이 자국 내 투자 증대, 현지 산업구조 고도화, 고용창출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GCC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2015년 최초로 현지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UAE와 카타르도 잇따라 이를 시행하였음.
- 각국이 도입한 제도들의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로컬 콘텐츠에 대한 고려 대상과 이에 대한 가중치가 상이함.
- 현지화 제도는 자국산 재화 및 서비스 조달, 자국민 채용 및 교육, 공급자 개발 등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어 단순 투자 촉진보다는 GCC 국가들의 목표에 더 상응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경영비용 등의 측면에서 외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로컬 콘텐츠 점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공급자 개발 및 현지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추가로 전개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함께 입찰 참여 과정에서 현지화 제도에 대한 회계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등의 제반 비용도 발생할 것이며, 현지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최종 생산품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표 2. GCC 주요국의 현지화 제도 비교

| 구분 | 사우디아라비아 IKTVA | UAE ICV | 카타르 타우틴 ICV |
|-------|--|--|--|
| 주관 | 아람코(Aramco) | ADNOC | QP 외 14개 에너지 기업 |
| 관련 정책 | 사우디 비전 2030 |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 카타르 국가비전 2030 |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까지 에너지 부문 자국산 재화·서비스 구매 비율 70% 달성 • 2021년까지 에너지 부문 자국산 재화·서비스 수출 비율 30% 달성 • 2021년까지 50만 개 일자리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실현 • 자국민 고용 확대 • 핵심역량의 현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90억 리얄(약 25억 달러)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 창출 • 5년 내 자국산 재화·서비스 구매비율 40% 달성 • 에너지 부문 일자리 창출 |
| 평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 자국민에 지급된 급여, 자국민 교육·개발 비용, 공급자 개발 비용, 현지 연구개발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업: UAE 내 발생한 제조비용(50%), 현지 투자 규모(25%), 자국민에 지급된 급여 및 혜택(15%), 외국인 고용자 수(10%) • 서비스 기업: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50%), 현지 투자 규모(25%), 자국민에 지급된 급여 및 혜택(15%), 외국인 고용자 수(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 자국민 및 외국인 교육 비용, 공급자 개발 및 인증 비용, 카타르 내 자산의 감가상각 |

주: 사우디아라비아 IKTVA와 카타르 타우틴 ICV는 평가 항목 간 비중 동일.

자료: Aramco(2019), p. 3;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In-Country Val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 Tawteen, In-Country Val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

3. 정책 제언

-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하여 양 지역 간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술 상용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디지털 협력을 강화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자동화, 온라인 쇼핑, 재택 근무, 이러닝(e-learning)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GCC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저성장 및 양극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한국과 GCC 국가들은 각기 다른 경제구조와 재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음.
- **현지인의 업무 수행능력, 책임감, 업무태도 등은 국내 진출기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 현지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함.
 - 현지 대학이나 기술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한국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업무 스타일과 익숙해지도록 함.
 - GCC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과 국내 직업훈련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직무역량과 한국 기업에서의 적응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축함.
 - 현지 교육훈련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국내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현지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분교 또는 지사를 설립함.
- **현지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응해서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조달도 늘리는 한편 국내 기술수준을 한층 더 개선하는 대응방안이 필요함.**
 - 현지 주요 인사와 정기적 교류를 갖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규제 및 절차 변경 등에 대한 정보 습득이 필요함.
 -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지원기관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별로 '통합지원센터(가칭)'를 두고 국내 기업간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지원센터는 지원기관간 중복 업무를 방지하고 초기 정착과정 및 시장조사부터 분쟁에 따른 법률 자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현지에 한국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유통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류공간으로서 활용함.
-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법인 설립, 벤더 등록, 건물 관리 등을 대행해주고, 임대료, 전기료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진출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KIEP**